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15, No.2, December 2008

방산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육성방안

정 진택*

Strategies for Enhancement of High Tech. Small & Medium Enterprises in Korean Defense Industry

Jeong, Jin Taek*

내용목차

1. 서론
2. 국방연구개발의 정책 및 현황
3. 방산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육성방안
4. 결론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방산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육성방안

Strategies for Enhancement of High Tech. Small & Medium Enterprises in Korean Defense Industry

Abstract

The defense industry, supplying or developing defense articles which are needed to maintain and improve nation's military power, is a cutting-edge industry integrating technical accomplishments of the era. South Korea lags behind other leadingnations in terms of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basis for defense compani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poor, compared to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Recognizing that nations will focus on high-end technology to survive the future battlefield, DAPA came up with defense R&D strategies which include goal-oriented R&D, setting up of defense R&D implementation system, sophistication of project management methods, promotion of defense export, and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defensetechnology cooperat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efense R&D polic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possess excellent defense technologies, should play a key role. Therefore, DAPA is now promoting growth and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hancing technical and informational assistance, and supporting commercialization of defense technology and their marketing efforts.

<Key Words> Defense Industr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search and Development, High-end Technology

1. 서론

1.1 방위산업의 특징

방위산업[1]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사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거나 개발하는 국가의 중요사업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은 전쟁 등 국제적 분쟁상황에서 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또한 수많은 인류 전쟁사에서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전 시대를 통틀어 그 시대의 기술적 성과를 집약한 최첨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첨단 정보통신·과학 기술이 군사분야에 접목되면서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 규모보다는 '정보·지식·기술의 우위'에 의해 결정되는 정보·과학전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방위산업은 정부(군)가 유일한 수요자이므로 소요군의 요구에 의해 성능 및 수량이 결정되는 수요독점(monopsony)적 시장이다.

1.2 방산업체의 현황

'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위산업 관련 수많은 기업이 있으나, 그 중 90개가 방산업체로 지정(방산물자는 약 1,500개)·관리되고 있다. 지정된 국내 방산업체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방산업체의 방산부문 가동율은('06년) 61%로 민수부문를 포함한 방산업체 평균 가동율 89%보다 낮은 상황이고 보유 기술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

1)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제3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된 조달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제34조)'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미래 전장을 대비하거나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것도 광의의 방위산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위산업을 '방산물자 등 국가방위에 관련된 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2005년 30개 사업 표본조사 결과', 방위사업청, 2006

<표 1> 국내 방산업체 현황 ('06년)

항 목	방산부문	비 고
인 력	약 2만명	방산업체 전체 인원(13만명)의 16% 수준
매 출 액	5.45조원	방산업체 전체 매출액의 7% 수준
영업이익률	4.9%	방산업체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 : 3.5% (제조업 평균 5.3%)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방산업체 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9.2%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반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비율이 전체 기업의 수의 99.8%를 차지하고, 매출액 비율이 전체의 47.8%임을 감안할 때 방산분야의 중소기업 기반이 일반 제조분야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2> 방산업체 구성 현황

구 분	제조업 전체('06년)		방산업체 방산부문('06년)				
	기업 수	매출액	기업 수	매출액	생산 형태 분류		
대기업	653개 (0.2%)	452.7조원 (52.2%)	33개 (37.5%)	4.95조원 (90.8%)	조립	18	55%
					부품·소재	15	45%
중소기업	338,496개 (99.8%)	415.1조원 (47.8%)	55 개 (62.5%)	0.5조원 (9.2%)	조립	9	16%
					부품·소재	46	84%
계	339,149개	867.8조원	88개	5.45조원	조립: 27, 부품·소재: 61		

1.3 방위산업의 현황 및 문제

국내 방위산업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전력증강 정책과 2000년대 국방개혁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에 불과

하고[3]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체계종합 위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결과 핵심기술 개발 능력이 미흡하여 첨단무기체계 및 주요 핵심부품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전문화·계열화 제도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등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방산업체들이 제품경쟁력 확보보다는 내수물량 확보에 주력 하였으며, 방산업체의 평균 방산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7%에 불과하는 등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5% 미만(무기수입 규모는 세계 5~7위이나 수출규모는 17~20위 수준)으로 방산매출 대비 수출비중을 2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미국 등 방산 선진국에 비해 내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2. 국방연구개발의 정책 및 현황

2.1 국방환경변화와 국방연구개발의 성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을 보면 먼저, 미래 전장환경이 첨단군사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정밀무기 중심의 복합무기체계와 네트워크 중심전쟁으로 변모함에 따라 무기체계의 첨단화,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군사위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군비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 국제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등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자국의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수출 및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개발은 1970년대 박격포, 발칸포 등 선진국 무기체계의 모방에서 시작하여 '08년 현재 K9 자주포, 흑표, KT-1, T-50, 정밀유도무기 등 기반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와 기술개발을 통해 군의 현대화 및 국가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1970부터 2006년까지 약 12조원을 투자하여 약 138조6천억원의 경제

3)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방위사업청, 2008. 5

적 효과를 창출[4]하는 등 경제동력원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2 국방연구개발정책의 추진전략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방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시 국가과학기술과 산업역량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방법 결정시,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표 3>과 같은 단계별 목표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 국방연구개발 중·장기 목표

단 계	목 표
중 기 (2010~2014)	선택과 집중으로 첨단무기, 핵심기술 개발능력 강화
장 기 (2015~2024)	선진국 수준의 첨단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

1)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우리의 제한된 예산, 인력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전력체계 개발 및 효과중심의 네트워크 중심작전(NCW)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先 기술개발, 後 체계개발” 원칙하에 무기체계 연구개발 소요 및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등을 근거로 기술적 중요성, 잠재성, 수출 및 산업 기여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범정부차원의 국가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개발된 기술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확보 방법을 다양화 하고자 한다.

셋째, 미래 핵심전력체계 및 중점분야 위주로 기술을 개발하되 S/W기술, 통

4) ‘국내 국방기술과 민수기술의 상호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11

합전 능력 극대화를 위한 기술 등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등도 병행 개발할 예정이다.

2) 국방R&D의 수행체계

국내 방산업체 경쟁력 제고 및 국방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핵심전력 무기체계 및 개발 위험도가 높거나 경제성이 없는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일반전력 무기체계 및 단기적용이 가능하거나 민수 우위분야 기술은 산·학·연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간 사업영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국방기술 기획체계를 단기적으로는 무기체계 소요 및 국내외 기술수준 조사 등을 근거로 과제를 선정하는 하향식(Top-Down)과 연구자가 제기한 과제를 검토·종합하여 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혼합하여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하향식 기획체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와 연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보강하는 등 국방기술 기획 및 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3) 사업관리기법의 과학화

방위력개선사업의 체계적 비용 및 성과관리 등 과학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 소요제기로부터 개발, 운용, 군수지원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획득 전 수명주기에 걸쳐 M&S를 기반으로 모의분석 및 검증하는 시뮬레이션기반 획득(Simulation Based Acquisition: SBA)체제, 사업성과관리(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EVMS) 목표비용관리(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CAIV) 등 다양한 사업관리기법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4) 방위산업의 육성 및 수출활성화

국내 방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내 연구개발 우선정책 지속 추진 및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업체가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방산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하여 사업추진전략 수립시(선행연구단계)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제도화 하였고, 국제 방산협력 확대, 방산수출 지원조직 설치, 해외 방산시장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및 방산수출기업 육성 등 범정부차원의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5) 국제 군사기술협력의 강화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보호주의 극복과 경제적인 핵심기술 확보 및 방산수출 지원을 위하여 국제 군사기술협력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상대국의 기술수준에 따라 절충교역, 기술도입, 기술수출, 공동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협력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JCTD(Joint Capability Technology Demonstration) 참여 등을 통한 선진국의 선진기술을 습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3 주요 국방연구개발사업

1) 기초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은 대학 및 연구소(정부출연연구소 포함)를 장기간 지원하여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국방과학분야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여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기술연구, 특화연구센터 및 국제협력기술획득 사업으로 구분되며, '08년도에는 약 145억원이 투자되었다.

2) 핵심기술사업

핵심기술사업은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 첨단기술로서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과연 및 산학연 주관 사업으로 구분되며 '08년도에는 약 1,300억원이 투자되었다.

3) 민군겸용 기술사업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부처 및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민수 및 군수분야에 동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연구개발비 중 25%(중소기업)에서 50%(대기업)이상의 민간투자가 요구되며 '08년에는 약 175억원이 투자되었다.

4)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은 기 개발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통하여 민간기술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 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08년에는 약 15억원이 투자되었다.

5) 무기체계 개발사업

무기체계 개발사업은 현존전력 대체를 위한 차세대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미래 전장환경 하에서 소요가 예상되는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08년에는 약 7,800억원이 투자되었다.

3. 방산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육성방안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참여현황을 보면 핵심기술사업의 경우 88개 연구기관(주관기관 및 시제업체, '08년 기준) 중 19개 업체(약 22%),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는 20개 연구기관(주관기관, '07년 기준) 중 8개 업체(약 40%), 신개념기술시범사업에는 3개 연구기관('07년 기준) 중 1개 업체(약 33%)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중소기업 참여시 총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정부지원 가능)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핵심기술사업의 경우 참여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업) 19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5] 조사대상의 86.9%가 방위산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5.8% 수준으로[6]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67%) 및 '08

5) '이노비즈 기업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이노비즈협회, 2007. 4

년 현재 국방 과학기술수준(70%)보다 높은 것으로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 및 우수 기술력 활용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부족(40.3%), 높은 진입장벽(25.1%), 경제성 및 자금부족(각 5.3%)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중소기업 기술개발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육성 및 국방 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국방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기술사업화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1 중소기업의 육성 및 참여 확대

첫째, '08년 국방비 대비 5.4% 수준인 연구개발비를 '12년 7%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국방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先 기술개발 後 체계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에 예산을 중점배분(연구개발비중 핵심기술 투자 비율 확대 : '07년 7.7% → '12년 12% 이상)할 예정이다.

둘째, 핵심기술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사업 비율을 '08년 39%에서 '12년 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만 참여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민군사업 예산도 '07년 135억원에서 '12년 35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연계하는 등 과제기획체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조건부 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을 현재의 청 직접구매품목에서 무기체계 종합업체[7] 구매대상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섯째, 전문화·계열화 제도[8]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2005. 9

7) 무기체계 생산의 최종단계로 협력업체로부터 부품·구성품 등을 납품받아 조립하여 무기체계를 완성하는 기업

8)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연구개발 촉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8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폐지 예정

만 참여 가능한 경쟁품목 별도 지정, 무기체계 종합업체로 선정된 대기업의 협력업체 선정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인 경우 공개경쟁을 유도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잠식방지 및 업체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제도”를 방산업체 신청시 발동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핵심부품·소재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후 2~3년 된 기업에 대해 기술 및 경영지원, 군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국방벤처센터를 ‘08년 현재 2개소(서울, 인천 : 30개 업체 입주)에서 7개소(’12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시 대기업-중소기업간 컨소시움을 구성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업체선정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2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지원 강화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민수이전 대상기술 목록 및 기술이전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방과학기술 거래장터”를 개설(’08.10)·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경쟁 품목, 개발신청 현황 등)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용이하게 부품국산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품국산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서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술 및 정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국방연구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7년 8월 “국방과학기술 아카데미”를 대전, 안흥 및 창원에 개원하여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 군 및 관련기관, 방산업체 실무자들에게 1일~4일간 무상으로 교육(2007년 24개 과정에 1,689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방산업체 및 중소기업이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용역 의뢰 및 국방과학

연구소 보유 전문시험시설·장비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술용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시스템을 통해 ‘07년도 106건의 기술용역을 실시(중소기업 29건)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분야간 기술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대덕 테크노밸리에 “국방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여(‘06년 2월) 국방기술의 상용화 지원, Spin-On 대상기술 정보수집, 국방기술 정보공개, 국과연 전문인력 활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3 기술사업화와 판로지원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먼저, 대기업 및 군 관련 기관에 대해 중소기업보유 신기술의 홍보가 가능한 신기술 소개회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연 3회(1월, 5월, 9월)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홍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기 개발된 우수 민간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국방벤처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과제 발굴 활성화 및 관련예산의 증액(‘08년 15.6억원 → ’12년 100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장비 구매시 적용되는 절충교역[9] 대상에 선진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일반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하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변화하는 국방연구개발 환경, 즉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산·학·연의 참여기회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연구개발 사업 및 국방연구개발 기술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9)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체계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관련 지식,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으로 현재 절충교역 대상사업 중 수출분야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 측면에서 군수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기법의 과학화” 정책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수행 및 성과관리·비용관리·자료관리 등을 위한 선진 사업관리 시스템(System Engineering: EVMS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국가안보를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미래 첨단무기체계 획득과 방위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대기업과 함께 기술개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참여 확대,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및 판로지원 등 방산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노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결합될 때 국내방위산업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국정과제 및 방위산업 중장기(‘08~’12) 목표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 국방기술과 민수기술의 상호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007.11.
[2] 방위사업청, 『2005년 30개 사업 표본조사 결과』, 2006
[3] 방위사업청,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2008.5.
[4] 산업연구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2005.9.